

민선 5기 1년,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정평가

민주 일색 탈피, 행정 감시 폭 넓혔다

지난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광주 시의회는 제6대 의회가, 전남도의회는 제9대 의회가 출범했다. 과거와 달리 초선 의원 숫자가 많아지고, 민주당 일색이었던 시·도의회에 비 민주당계 의원들이 입성하면서 의회 내 견제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대체로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인터뷰 5면>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6명 중 초선이 21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전반기 의장도 초선 의원이 선출됨으로써 의욕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또한, 교육위원 4명을 제외한 22명 의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이 입성하면서 '민주당 의원 일색'이었던 민선 5대 의회 때와는 달리 의회 내 '견제세력'이 등장했다. 교육위원도 전교조 출신 2명, 교장 출신 2명이 포진해 '적절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는 138일간의 회기동안 25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조례 39

초선, 민노·무소속 진출 늘어 견제와 균형 구도

광주 유급 보좌관제 밀어 붙여 시민단체와 충돌

전남 62명 중 8명 선거법·비리 연루 도덕성 흠집

간을 의원 발의해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분야 단체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입법활동과 주요정책 연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회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의정모니터위원을 12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특히 6대 의회는 의정발전에 대한 각종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면서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전북도의회 의장단이 참여하는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구성해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립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놓고

집행부와 공동보조를 맞췄기도 했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시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비판여론에 휘말렸으며, 교육직인 활동이 기대했던 초선 의원 중 일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1년 전 9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전체 62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이 71% (41명)를 차지한데다, 비 민주당계 의원들의 원내 진출이 이뤄지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일문 일답' 방식의 도정 질문을 도입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입법·정책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치러진 F1 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도민 대의기

관으로서 지역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 발전연구회나 명품도시연구회 등 8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도 힘썼다.

'영양호 통선문 설치'와 '광주 송정~목포 구간 KTX 노선 신설 촉구 결의안', '쌀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민감한 이슈와 지역 현안에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한 예산 심의와 개인 초 교육의원들의 자리 다툼으로 인한 파행 등 구습을 여전히 답습한데다, 도정질문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면피부성 감사'와 '민원 청탁상 질의' 등이 이어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활동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체 의원 62명 중 8명이 공직선거법과 오현섭 전 연수시장의 비리사건, 뇌물사건 등에 연루돼 휘말려 있는 등 도덕성 흠집이 난 것도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갈등 양상에도 변진 F1 대회에 대한 이견 조율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치러진 F1 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도민 대의기



어르신들 동심의 세계로~

28일 광주시 서구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5개 구를 대표해 참가한 어르신들이 모래주머니를 이용해 '백 티프리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헌법 개정·대선 이슈화로 자치 역량 확보를”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권역 세미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수한 여건이나 행정수요, 재정 자립도, 자치역량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집권체제의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이슈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의 주최로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권역 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호 조선대 교수와 이민원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빈약한 지방자치 의지를 비판한 뒤 “지방발 운동세력의 강화, 전국 의제 설정, 지역발전 기초체력 향상, 지방화시스템별 개편 등에 나

하운동 전개 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인호 조선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분권화 정도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느끼는 분권 체감도가 낮다”며 “스위스 한 연구소가 세계 각국의 지방분권과 경제성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정도 높았으며, 이는 곧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현 정부의 빈약한 지방자치 의지를 비판한 뒤 “지방발 운동세력의 강화, 전국 의제 설정, 지역발전 기초체력 향상, 지방화시스템별 개편 등에 나

서는 한편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이슈화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공약으로 내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금주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권한 이양 미흡으로 중앙집권 지속 ▲재정 의존 심화 ▲특색 있는 지역 개발 한계 ▲확실적 통제로 지방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김영남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토론에서 “20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지방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원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man in a suit running towards a building labeled '나라갈라지는 쪽으로...' (Towards the direction where the country is splitting...). The man is carrying a sign that says '기대도 안했다지만... 좀 그렇긴 하다' (Even though I didn't expect it... it's a bit like that).

이대통령 “기초의원 정당공천 필요있나”

기초의원 의장들과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국 기초단체인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의원 의장 20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의회는 지방 자치의 핵심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해 달라”며 “특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원이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의장단은 정부 차원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전국 기초의원 의장단은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지방의회 제출법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선거구제 환원과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사무직 인사권 환원 등을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반값 등록금’ 6월 국회 처리 불발

상임위 논의도 못한 채 종료

여야정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2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도 못한 채 두 시간 만에 종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민생안정 여야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교과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은 여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여당 측이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7월 중으로 못박자고

한 반면 여당은 이를 거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전 의원은 “6월 회기 내내 임시비안안 이어질 뿐 반값 등록금 논의가 남고 있다”며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합의해 언제 처리할 것인지 일정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협의하느냐”면서 “시한을 못 박고 당장 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이에 여야 간사는 40여분간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박지영기자 jpark@

JOYTRAVEL advertisement for summer travel packages. It features various destinations like Jeju, Japan, China, and Europe, with prices and travel details. The ad is colorful and includes a photo of a man in a suit, likely a representative of the travel agency.